

# “월세 늘고 통신료 줄었다”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작업 1년 전 比 0.1%p ↓... 해외단체여행비 급증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중치 개편 작업을 18일 완료했다. 개편 작업으로 인해 지난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가구의 최근 소비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가중치를 변경한다. 지난 2013년부터 기존 5년이었던 가중치 개편 주기를 단축해 연도 끝자리가 0. 2. 5. 7인 해에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가 두 번째 개편이다.

이날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자료를 평균해 사용한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 것을 반영, 전년 자료가 아닌 2개년도 자료를 평균하는 ‘판초법(bordered base system)’을 적용해 통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이용해 산출된다. 가중치의 모집단은 농·어가 제외 1인 이상 가구, 전국의 소비 지출액에 중과차 구입비를 제외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월세 평가

금액을 추가해 작성된다.

가중치 개편과 함께 계절 품목 지수 작성 방식도 개선됐다. 농산물 등 계절 품목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조사를 할 수 있어 불가지수의 편향(bias)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 달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특히 높다. 미출회 기간 중 지수를 출회 기간 마지막 달의 지수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현행 ‘이월(carry forward)’ 방식에서 계절 품목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되는 품목 전체의 지수 변동률을 계절 품목에 적용하는 ‘대체(impulation)’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15년에 비해 주류·담배(15.5→1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41.7→44.2), 보건(68.7→69.8), 교통(111.0→112.6), 오락·문화(57.2→61.2), 음식·숙박(129.4→131.8), 기타상품·서비스(55.4→56.9)의 가중치가 늘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137.7→137.6), 의류·신발(61.4→61.1), 주택·수도·전기·연료(170.2→165.9), 통신(54.8→63.5), 교육(97.0→99.6) 등은 줄었다.

가중치가 큰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월세(43.6→44.8), 공동주택관리비(18.6→19.0), 외래진료비(15.2→16.3), 고등학생학원비(13.6→14.0) 등은 가중치가 증가한 반면,

전세(49.6→48.9), 휴대전화료(38.3→66.1), 휘발유(25.1→23.4), 전기료(18.9→17.0), 중학생학원비(18.0→15.9), 도시가스(18.3→14.8) 등은 감소했다.

2015년 대비 가중치가 크게 상승한 품목은 해외단체여행비(10.0→13.8), 커피(외식, 4.8→6.9), 휴대전화기(8.2→9.9), 대형승용차(5.1→6.5), 다목적승용차(8.9→10.2) 등이다. 반면 가중치 감소 폭이 큰 품목은 도시가스(18.3→14.8), 휴대전화료(38.3→66.1), 중학생학원비(18.0→15.9), 학교급식비(4.0→2.0), 전기료(18.9→17.0) 등이다.

가중치 개편 및 계절 품목 작성 방법 개선으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전년 누계치는 1.6%에서 1.5%로 약 0.1%p 하락했다. 가중치 변경에 따른 효과가 -0.02%p, 계절 품목 작성 방법 개선에 따른 효과가 -0.03%p다. 이밖에 올해 8월 7일 발표된 전기료 한시 인하 정책이 7월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0.02%p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윤성 통계청 불가동향과장은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 지출 구조를 반영했지만, 불가지수 상승률 하락으로 실제 불가지수의 괴리는 더욱 벌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된 2017년 1월~2018년 11월 불가지수는 개편된 2017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한 신지수로 소급해 변경된다. 오는 31일 발표될 올해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동향부터는 2017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한 신지수로 작성된다.

### “산지 딱 30분 됐는데”

## 휴대폰 할부계약·청약철회는 왜 어렵나

#. A씨는 2년 할부로 휴대폰을 샀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구매 당시 시간이 늦어 판매점에서 계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매점에서 “계약서는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A씨는 기다리다 못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봤고, 자신이 2년 계약이 아닌 3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역시 할부계약으로 휴대폰을 산 B씨. 기기를 받고서 약 30분 만에 다시 대리점을 찾았다. 청약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시 청약철회를 요청했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의 실제 사례다. 최근 휴대폰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늘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

이 공란으로 빈 경우가 적발됐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녹장 발급하는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일부 대리점에선 개봉 이후에만 계약서를 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 할부거래법상 50만원 이하의 파태로 부과 대상이다.

특히 계약서 미지급은 고령층이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흥정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잘 아는 젊은층에게는 계약서 발급을 신경쓰는데 노약자나 학생들에게는 약의적인 과실인지 대부분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점에선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외품목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미 설치된 냉동기·보일러 등이 있다. 휴대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판매가 불가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한해서 청약철회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스

### 공정거래위원회,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 대리점에선 노인·학생 대상으로 계약서 아예 안 주

사, 대리점 5~10곳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할부계약서 미지급, 계약서상 필수 항목 누락,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 건수가 1250건 가량인데, 여기서 상당수가 실제 위반 사례였던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

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휴대폰 계약서에 ‘할부원금 월 납부액’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코스피 (KOSPI)	코스닥 (KOSDAQ)	원/달러 (USD/KRW)	금리 (KOR)
2,061.83	656.13	80	0.00%
▲9.26 (+0.45%)	▼5.77 (-0.87%)		

  

코스닥 (KOSDAQ)	원/달러 (USD/KRW)	금리 (KOR)	금리 (KOR)
656.13	80	0.00%	0.00%
▼5.77 (-0.87%)			

  

코스닥 (KOSDAQ)	코스닥 (KOSDAQ)	코스닥 (KOSDAQ)	코스닥 (KOSDAQ)
₩ 3,931,000	₩ 372	₩ 105,100	₩ 2,686
₩ 121	₩ 32,400	₩ 99,500	₩ 90,850
₩ 15.8	₩ 59.4	₩ 48,780	
₩ 73	₩ 4,433	₩ 62,550	

**불안한 증시, 고개드는 가상화폐** 불안한 국내 증시속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상승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달림로 전광판에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위).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영업점 앞 전광판에는 가상화폐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노년가구 자산 비중 ‘주택’이 75%...5명중 1명은 채무부담

### 주금공,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만 60~84세 노년가구의 보유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며 이 가구들의 보유주택 채무보유율은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8일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84세의 일반노년 3000가구를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금공에 따르면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보유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다. 서울

(85.2%)과 경기(81.6%) 거주 가구의 경우 지방도시에서 거주하는 가구(64.4%)에 비해 주택자산 비중이 더 높았다.

또 비교적 최근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2년차 주택연금이용가구의 경우 주택자산이 보유자산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60~84세 일반 노년가구의 보유주택 채무보유율(임대보증금·주택담보대출)은 21.0%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채무보유율이 높았다.

특히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80.9%가 채무가 있다고 답했다.

채무가 있다고 답한 가구의 평균 채무금액은 9828만원으로 보유주택 가격 대비 평균 2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금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0.3%로 평균 대출잔액은 8593만원이었으며 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9%였다.

고령층의 은퇴준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노년 가구 중 비(非)은퇴 가구의 은퇴준비율은 51.3%로 전년대비 3.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도 22.5%로 전년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일반노년가구의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51.8%로 가장 많았으며 연금소득(30.4%)은 공적연금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경우 월 수입의 대부분(89.3%)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연금소득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